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3.(화) 국무회의 안건보고 종료 시 배포 2026. 11. 3.(화) 06:00

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한 K-가축방역 개선대책 마련

- 사전예방·현장 역량 강화, 대응 실효성 제고, 방역관리체계 개선의 3대 전략 중심
- 농가 자율방역 지원을 강화하고, 질병특성과 위험도에 따른 대응체계 개선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'농식품부')는 그간 가축전염병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새로운 전파양상과 위험요인*에 대응하기 위해 **「K-가축방역 개선대책」**을 마련하였다.

* (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) 3가지 유형 동시 발생, (구제역) 인접국가 신종유형 발생, (아프리카돼지열병) 혈장단백 사료 등 전파경로 다양화 등

이번 대책은 '25년 수립한 「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」을 **달라진 방역 여건 변화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**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.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**생산자단체·내외부 전문가·관계기관 등**이 참여한 정책 태스크포스(TF) 운영 및 의견수렴(회의·의견수렴 17회, 자문회의 2회 등)을 통해 **개선과제를 발굴**하였다.

K-가축방역 개선대책은 **'사전예방 중심의 지속가능한 K-가축방역 체계 구축'**을 목표로, **▲사전예방·현장 역량 강화**, **▲발생 시 대응 실효성 제고**, **▲방역관리체계 개선**의 3대 전략으로 구성되었다.

【전략1】 사전 예방·현장 역량 강화

농장의 소독과 출입통제, 질병 탐지 등 **5대 핵심영역**에 **스마트·AX**를 도입하고, **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(KAHIS)을 고도화**하여 위험에 **실시간 대응**한다. 이를 위해 농장과 통제초소, 거점소독시설의 데이터를 KAHIS에 연계, 통합 활용한다.

또한, 민관협업을 통해 **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도입**('27~, 산란계, 종돈장·대규모 돼지농장)하여, **'청정인증농장'과 '우수관리인증농장'***에 방역물품 지원·보상금 감액경감 등 **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취약농가**에는 방역역량 제고를 위한 **컨설팅을 지원**한다.

* 청정인증농장: 농장시설운영기준 충족 + 특정 질병검사 음성(free)
우수관리인증농장: 농장시설운영기준 충족 + 주기적 질병검사로 관리

농가 방역 점검도 정부 주도에서 **농가 자율점검 중심**으로 전환한다. 농가는 **점검표에 따라 방역상태를 자율점검**하고, 정부는 **점검 미실시 농가·무작위 선별농가·고위험 농가 등을 집중 점검**하여 보완·지도한다.

보다 효과적인 방역 교육을 위해 농장주뿐만 아니라 **농장관리자·종업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고, 외국인 종업원**을 대상으로는 입국부터 농장 근무까지 **단계별 다국어 교육 프로그램**을 제공한다.

민관협업을 통한 **한국형 백신 개발로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**을 강화한다. **'27년까지 구제역**은 **플랫폼 백신 상용화**, **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**는 **백신·진단법 등**을 개발하고, **아프리카돼지열병(ASF)**은 **'30년**까지 **백신 개발을 추진**할 계획*이다. 또한, **고병원성 AI**는 상시백신 도입 여부 검토를 위해 **소비자·전문가·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백신검토위원회**를 구성·운영('26.10월~)한다.

* 구제역 플랫폼 백신 상용화(민간업체 중심), 고병원성 AI 백신·진단법 개발(검역본부 중심), ASF 백신개발(검역본부·민간업체 협업) 추진

아울러, 방역물품의 표준규격 마련, 시료채취 및 축사 전실(前室) 설치기준 개선 등을 통해 **현장 방역 애로사항**도 개선한다.

【전략2】 발생 시 대응 실효성 제고

재난형 전염병인 고병원성 AI, 구제역, ASF 등의 질병별 특성과 전파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**사전예방 및 확산 방지책**을 마련한다. ①**구제역**은 소 이력관리시스템과 KAHIS를 활용해 **백신접종 누락개체**를 찾아내 관리하고, **새로운 유형(SAT1형)**에 대비하여 **위험지역 사전접종 및 백신비축***을 추진한다. ②**ASF**는 야생멧돼지, 불법 축산물 유통 점검, 혈장단백 사료 등 **3대 전파 위험요인을 관리**한다.

* 구제역 SAT1형 백신은 '27년까지 3,200만두 분 비축('26년 내 1,000만두 분)

특히 ③**고병원성 AI**는 지난해 발생이 많았던 **산란계 농장을 중심**으로 **출입 사람·차량 사전등록제**를 도입해 **4단계 방역으로 강화**하고, **밀집단지별 맞춤형 방역프로그램**을 운영한다. ④**럼피스킨**(LSD)은 위험농가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, 전문업체를 통한 **긴급방제** 등을 추진한다.

축산농가에 연간 약 6,200억 원(추정)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**5대 경제성 가축질병***에 대해서는 실태조사·맞춤형 백신 공급·청정농장 인증 등 **종합대책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.**

* (예) 소바이러스성설사병(BVD), 돼지유행성설사병(PED),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(PRRS),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LPAI), 닭전염성기관지염(IB)

가축처분과 **이동제한**은 **질병 특성과 위험도 평가**에 따라 **탄력적**으로 적용하여, 확산 차단에 **반드시 필요한 조치 중심**으로 대응한다. 시군 내 **구제역 최초발생 농가**라 하더라도 조건 충족 시* **부분적 가축처분**을 실시하고, ASF **발생농장**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장은 정밀검사와 위험도 평가에 따라 **가축처분 유예가 가능**하도록 개선한다. 이동제한과 일시이동중지도 발생지역과 축종·위험도에 맞춰 적용한다.

* ①국내 백신접종 유형, ②가축방역관이 임상증상 유무 확인, ③백신항체 양성률 수준 평가

역학조사는 **중앙·지방 합동조사**로 중복성과 기간을 줄이고, 조사 대상을 **농장 종업원과 출입자**까지 확대해 심층 조사한다.

또한,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보상금 상한을 **최대 80%에서 90%**로 상향하고, 시군구별 **최초 신고 농가는 최대 100%**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편*한다. 방역**우수농가**의 보상금 감액 경감률은 **10%에서 15%**로 높여 우대하되, **고의적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미이행 농가**는 엄격히 관리한다.

*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개정 '26.10월, 시행 '27.4월

【전략3】 방역관리체계 개선

먼저, 현장 **가축방역관 부족 문제**에 대응하여 백신접종·소독 등의 업무는 **민간과 협업**하고, 관계부처 등과 **가축방역관 처우개선 협의**를 지속한다. 가축방역관은 진단·예찰, 신종전염병 대응 등 **방역 전문업무에 집중**하고, 농장점검·예찰·백신접종 등은 **민간수의사 등과 협업**하여 추진한다.

아울러, 관계부처 등과 가축방역관 직급·수당,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 **처우개선을 지속 협의**하면서, 방역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**공수의 위촉권한을 시군에서 시도까지 확대**하고, **민간수의사와 퇴직 수의직 공무원**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.

마지막으로, 현재 사후대응 중심인 「**가축전염병 예방법**」을 **사전예방 및 위험관리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면 개편**하여, 변화하는 현장을 반영한 제도 기반을 구축한다. 가축전염병별 위험도에 맞는 방역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**분류체계를 위험도 중심으로 전환***하고, **가축폐기물처리업·방역컨설팅업 등 민간 방역업종**의 등록 및 평가체계도 마련하여 민간 방역 생태계를 조성한다.

* 예시: (기존) 1종, 2종, 3종 가축전염병 → (개선) 긴급관리, 중점관리, 상시관리 가축전염병

농식품부는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법령·고시 및 긴급행동지침(SOP) 등을 정비하고, 생산자단체와 지방정부, 관계기관 등과 협업하여 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.

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"그간 정부와 현장의 노력으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성과가 있었으나, 새로운 전파경로 등 변화하는 방역 여건으로 인해 **기존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**도 있었다."라며, "이번 대책으로 **관계기관 및 농가의 사전예방 역량**을 높이고, **방역 미비점을 보완**하여 변화하는 방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**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**을 위해 노력하겠다."라고 밝혔다. 이어 "지방정부와 관계기관, 축산농가의 **관심과 협조**를 부탁드린다."고 덧붙였다.

참고. K-가축방역 개선대책 주요 내용(3대 전략·15개 과제)

담당 부서 <총괄>	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욱 (044-201-2511)
		담당자	사무관	이현경 (044-201-2515)
<AI>	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	책임자	과 장	황성철 (044-201-2551)
		담당자	사무관	이주원 (044-201-2555)
<구제역> <ASF> <럼피스킨>	구제역방역과	책임자	과 장	김정주 (044-201-2531)
		담당자	서기관	이병용 (044-201-2532)
		담당자	서기관	김지호 (044-201-2537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원 (044-201-253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K-가축방역 개선대책 주요 내용(3대 전략 · 15개 과제)**

전 략	주 요 과 제
사전예방 · 현장역량 강화	1 **5대 방역 AX 도입과 방역관리시스템 고도화로 사전예방 역량 강화** - 농장 5대 분야 AX 기술 도입('27~ 농장·지역 방역 AX 패키지 사업 추진) - 국가가축방역관리시스템(KAHIS) 고도화 및 차세대 전환으로 실시간 위험 예측 강화 2 **잘하는 농장-우수농장 인증제, 미흡한 농장-컨설팅 지원** - 질병검사 기반 우수농장 인증제 추진, 대상 축종 단계적 확대(산란계→대규모 양돈·종돈) - 취약·발생농장 대상 방역 컨설팅 지원 3 **농장 맞춤형 교육 강화 및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** - 농장관리자·종업원(외국인 포함), 발생농장 맞춤형 특화 교육 운영 - 방역교육 통합관리시스템(플랫폼) 구축·운영 4 **농가 자율점검, 정부 선별점검** - 소·돼지·가금농장 자율점검 시범사업 추진, 정부는 위험농가 등 선별점검 5 **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한국형 백신 개발** - (구제역) 국내 백신 제조시설 건립, 민간 플랫폼 백신 상용화 지원 - (ASF) 정부·민간이 협업하여 백신 개발·상용화 추진 - (고병원성 AI) 백신·진단법 개발, 상시 백신도입 관련 백신검토위원회 운영 6 **현장 방역애로사항 개선** - 방역물품 표준규격 마련, 소독제 유효성검사 강화·공급방식 개선 -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시료채취, 질병예찰, 전실 등 운영 개선
발생시 대응 실효성 제고	1 **재난형 가축전염병 관리 강화** - (고병원성 AI) 차량·인력 사전등록, 무인통제초소, 밀집단지 맞춤형 방역, 전담관 운영 - (ASF) 야생멧돼지, 불법축산물, 혈장단백 사료의 3대 위험요소 중점관리 - (구제역) 신종 유형(SAT1형) 대응 및 백신접종 누락개체 접종 관리 - (럼피스킨) 고위험지역 농가 백신접종 및 매개곤충 전문 방제 등 관리 2 **경제성 가축질병* 대책 마련·시행** * 소바이러스성설사병, 돼지유행성설사병,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,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, 닭전염성기관지염 - 맞춤형 백신 공급 강화 및 청정농장 인증 등 新종합대책 마련·시행 3 **질병 특성·위험도 기반 가축처분 체계 개선** - 일괄적 가축처분 방식 → 질병특성·위험도 기반 가축처분 최소화 4 **질병특성·발생상황별 이동제한 조치 탄력적 운용** - 최대 잠복기, 백신접종 등을 고려하여 이동제한 기간 단축 등 조정 - 위험도 평가에 기반하여 필요한 범위만 일시이동중지 명령 5 **자율방역 향상을 위한 농가 보상금 제도 개선** - 가축처분 보상금 한도 상향(최대 80%→90), 시군구 최초 신고농장(최대 80%→100) 방역우수농장 감액경감률 우대(10%→15), 백신 접종 명령 미이행시 감액(5%→20) 6 **역학조사 신속·정확화를 위한 절차 통합·체계화** - 중앙·지방 합동 역학조사로 조사 기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
방역관리 체계 개선	1 **방역 업무·조직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** - 가축방역관은 전문분야 집중, 소독·백신접종 등은 민간협업 강화 - 중앙-지방정부 간 중복·분산 업무를 축소하고, 역할 체계 개편 2 **방역 전문인력 수급 관리 강화** - 민간수의사, 퇴직 수의 공무원 활용 확대, 농장동물 수의사 양성 - 가축방역관 수당 상향 등 처우개선 협의 추진 3 **방역 제도 기반 확충** - 사전예방·위험관리 중심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전면 개편 - 가축폐기물처리업, 방역컨설팅업 등 방역업종 확대 통한 민간 가축방역 생태계 조성